

코로나19와 지역사회의 회복력

하승우(이후연구소 소장)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진행 중인 재난이라는 점에서 '이후'는 그 시기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중 하나라는 점에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가 아니라 코로나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누군가의 일상은 예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누군가의 일상은 이동의 불편함과 안전의 불안함을 걱정하게 되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노동은 비대면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 더 바빠졌을 것이고, 누군가의 삶은 무급휴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지 모른다. 어린이집과 학교가 문을 닫고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폐쇄되어 돌봄망은 흔들리고, 끊임없이 공개되는 확진자의 동선은 집 밖은 위험해라는 생각을 강화시킨다. 여행을 다니고 영화를 보고 자연을 즐기던 '여가'의 삶도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이 되었다. 서울에서 아침 먹고 일본에서 점심 먹는, 시공간이 압축되는 동경의 대상이던 글로벌 시민의 삶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이 되었다. 이런 변화가 일상이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더 중요하게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위험은 앞으로 겪게 될 위험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은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을 점점 더 위험 속으로 몰고 갈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슈퍼태풍, 홍수, 가뭄, 흑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주거지역과 생태계의 소멸, 식량/식수난, 에너지난 등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위기에서 한국 사회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

아프면 쉬어라, 이 당연한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던 한국사회에서 코로나19는 일단 멈춤의 시간을 만들었다. 일단 멈춤은 종결이 아니라 다시 걸어갈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쓰기에 좋은 공간이 지역사회이다.

1.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

(1) 경제: 국제생산체계의 변화와 양극화

코로나19가 불러온 여러 영향 중 가장 큰 영향은 국제생산체계(GVC)의 변화이다. 국제교역이 감소하고 기본물자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거란 예측은 이미 여러 곳에서 나왔고, 회복에 대한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은 과거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 그리고 항공산업이나 여행업처럼 산업기반이 거의 완전히 붕괴한 영역도 있고, 제조업도 물류공급망의 마비로 반도체나 소매 등의 몇몇 분야를 제외하면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불안정해 보이는 영역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인 먹거리이다. 기후위기로 이미 먹거리에서 비롯된 국지적인 분쟁들은 늘어나고 있고, 곡물수출제한조치를 내리는 국가들이 생기면서 '식량전쟁'이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심심찮게 목격하게 된다. 2018년 곡물 자급률은 21.7%,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은 훨씬 떨어지는데, 한국은 괜찮을까? 농촌의 붕괴와 농민의 사라짐이 당

연한 일로 여겨지는 한국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가 2020년 5월 11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9,933억원으로 2019년 4월보다 2,551억원(34.6%) 증가했다. 역대 최대규모일 뿐 아니라 심각한 구직난이나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영세자영업 비중이 높은 사회에서 일자리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푸는 초유의 사태는 이런 심각성을 반영한다.

그런데 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지만 그 심각성은 다르다. 때론 위기가 누군가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출퇴근이 자유롭고 전문직인 사람과 택배나 배달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위기감은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이런 격차는 심각해지고, 사회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은 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대나 고용 유지로 극복될 수 있을까?

코비드19와 같은 바이러스들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위한 생태계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코비드19로 전 세계의 탄소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은 역설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경제성장을 계속 고집할 것인가, 우리 삶의 행복은 경제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한가?

(2) 정치: 민주주의의 혼선과 정부의 강화

코비드19의 확산에도 제 21대 총선은 66.2%로 16년 만에 60% 투표율을 넘어섰다. 투표율이 올라갔으니 좋은 일이지만 이번 총선만큼 아무런 정책도 보이지 않았다는 선거가 없었다. 선거유세나 토론회조차 거의 없이 그냥 정당과 사람만 보고 찍는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은 건 어떤 의미일까? 유권자들은 후보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할 통로를 찾을 수 있었을까? 이런 과정이 없는 대의민주주의는 제 몫을 할 수 있을까?

코비드 19의 확산으로 각종 모임과 총회들이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다. 지방정부의 민관협력기구의 모임들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국회나 지방의회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반면에 중앙/지방정부들은 재난이라는 위기를 맞이해 최대한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상황 탓에 시민들은 이런 권력행사를 환영하기도 했다. 문제는 시민의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의 강화가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어렵다는 점이다.

대안으로 많이 얘기되는 것은 온라인 투표이다. 물론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투표는 최종적인 결정이고 민주주의에 필요한 것은 과정이다.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들이 만나고 충돌하고 조절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투표는 편견이나 선입견, 특정한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선택이다. 토론과 협의의 필요성을 확장하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의 상황은 정치의 축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 내부의 갈등이 발생할수록 그 갈등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세력들이 등장한다.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은 민주주의보다 강력한 통제와 질서를, 권력의 분산보다 권력의 집중을 요구할 것이다. 사회의 필요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지만 견제와 비판 없는 강화는 무능력과 부패를 부른다. 그리고 사회적인 위기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질서유지를 위한 알리바이로 활용하기 쉽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계속 건강할 수 있을까?

(3) 사회: 쓸모를 잃은 교육과 여전한 위험사회

코로나19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곳은 교육 쪽이다. 학교와 도서관은 문을 열지 못했고 각종 강좌들도 모두 취소되었다. 한국에서 교육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학벌(신분)과 세습을 위한 중요한 장치여서 개학연기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는데 현실이 되었고 면대면 수업을 대신한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고 있다. 교육관계와 교육내용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를 낳고 있고,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등장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학교파업(School Strike for Climate)은 제도교육의 쓸모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보건의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19 이후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원격진료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고 있다. 그리고 4월 29일 38명의 목숨을 빼앗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와 매년 2천 명을 웃도는 산업재해는 생명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를 반영한다. n번방 사건과 일상화된 성폭력은, 피신처가 된 가정에서 여성들에게 떠맡겨진 돌봄은 한국사회의 성차별과 불평등이 여전한함을 뜻한다.

코로나19가 낳은 또 다른 현상은 접촉을 피하는 현상이다. 비대면사회라고 얼굴을 맞대는 관계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안전을 신뢰할 수 없는 관계들에 대한 회피라고 봐야 한다. 즉 모르는 사람과 만나고 접촉하는 빈도가 빠르게 줄어든 것이고, 이것은 타자와의 접촉을 통해 나와 우리의 경계와 정체성을 인식하는 전통적인 존재론적 관점이 통용될 수 없음을 뜻한다. 사회가 관계망에 기초해 구성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사회의 기본적인 토대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겪고 있다(물론 코로나19의 확산 이전에도 한국사회에는 그런 징후들이 곳곳에서 보였다). 함께 위험과 불안을 겪어낼 관계가 사라지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4) 문화: 여가의 불안함과 디지털에의 적응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항공산업과 관광산업이다. 전 세계의 국경이 거의 봉쇄되면서 항공기는 운항되지 못했고 관광객은 사라졌다. 한 국가 내의 이동도 통제되면서 관광객을 부르던 유채꽃밭이 불태워지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파산도 문제이지만 한국의 중앙/지방정부는 관광사업에 매우 많은 자원을 투입해 왔다(중앙정부는 2019년 4월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을 발표하고 관광거점도시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앙/지방정부는 국제회의업(MICE), 의료·웰니스 관광, 크루즈 관광, K-POP 공연장 등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기존의 15개 국제/국내공항 외에 제주 제2공항, 흑산도공항, 울릉도공항, 각종 테마파크와 ○○랜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산업적인 면만이 아니다. 시민들의 여가생활은 이미 세계화되었고 그 욕구 또한 다양해졌다. 주말과 연휴, 휴가철의 여행계획을 짜는 것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여가는 불가능하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떠남이 되었다. 영화관이나 박물관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불안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한때 유행했던 소셜다이닝은 이제 위험한 식탁이 되었다. 이제 우리의 여가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 어쩌면 자치와 자급의 삶이 정말로 시작되는 걸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디지털, 4차산업, 가상현실의 적응이 정답처럼 제시된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더라도 더욱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2. 지역사회의 회복력

전염병은 이에 대응할 순간적인 자원집중을 요구하고 그런 점에서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를 따르는 시장보다 국가가 이런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염병이 지속될 경우에는 순간적인 대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적응이 요구될 경우 국가의 효율성은 낮아진다. 특히 한국처럼 정부기관의 부패나 경직성이 심하고 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곳에서는 더욱더 효율성이 낮아진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을 견제하며 사회를 재건할 지역의 힘이 중요해진다. 중앙으로의 집중과 밀도를 낮추고 압축된 시·공간을 좀 느슨하게 만들며 지속가능한 힘을 만들 곳은 지역사회라고 본다.

(1) 왜 지역사회인가?

코로나19가 만든 상황은 시장의 무기력과 국가의 재강화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시 기업이 이윤에 집착하고 국가는 비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사회의 자원과 힘이다. 그렇다고 지역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외려 지역에서부터 힘이 만들어져 전체 사회에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나 기후위기, 정치경제의 문제의 실마리를 지역에서부터 찾지 말라는 법은 없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지역사회가 자급의 구조를 갖추는 건 불가능하고 정치, 문화적인 면에서 한국의 비수도권 지역사회는 수도권에 종속되어 있다. 그렇지만 전염병이나 닥쳐올 위기가 밀집되고 집중된 사회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중앙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시스템은 중앙정부가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역사회의 노력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병원이 민간병원과의 관계를 확립하여 지역보건의료체계의 중심으로 서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종의 무게중심 전환이 필요하다.

『오래된 미래』를 쓴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는 지역화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지역화는 글로벌 경제가 입힌 손상을 만회하는 가장 전략적이고 효과적이며 상식적인 방법이다. 지역 경제가 튼튼해지면 개인, 즉 ‘내부’의 변화뿐 아니라 정치 변화, 곧 ‘외부’의 변화까지 일어난다. 지역화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경제학이다. 빈부 격차를 크게 줄이고, 에너지 사용과 공해를 줄인다. 아울러 지역화는 행복의 경제학이다. 개개인을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 다시 이어주기 때문이다.”(『로컬의 미래』, 남해의 봄날) 이 지역화 역시 모든 지역사회의 독립이나 중앙정부의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외려 시장의 힘이나 외부 위험요소를 통제하려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호지도 지역화를 ‘경제를 지역으로 가져오기(bring the economy home)’라고 부른다. 가져오는 과정이 중요한 셈이다.

현재의 상황에 적응하려면 무게중심의 이동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위기에서는 즉각적인 대

응도 필요하고 신뢰와 협동, 협력의 경험을 쌓고 그걸 관습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성장 중심의 세계관을 포기하고서도 삶이 가능하고 다양한 삶의 가능성과 그 지속성을 보장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조건, 불필요한 물건소비의 축소, 지역의 농산물과 에너지 생산량의 증가, 타자의 존재를 전제하는 정치적인 합의, 안심하며 접촉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론장, 투명하게 공개되는 다양한 정보와 이를 통한 토론, 도래할 사회의 위험들에 대한 학습과 집단지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한 참여경로, 삶의 희노애락을 나눌 관계망 등 다양한 과제들이 있다. 지금은 뭘 더 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며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시기이다.

(2) 왜 회복력인가?

마이클 루이스와 팻 코너티는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따비, 2015년)에서 회복력이란 어떤 시스템이 견뎌낼 수 있는 변화의 정도(외부의 교란들을 흡수해낼 수 있는 시스템의 역량)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회복력의 핵심원리를 다양성(토지나 자원의 다목적 활용 포함), 모듈화(구성원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 사회적 자본(신뢰와 단단한 관계망, 리더십), 혁신(새로운 기회와 자원활용을 통한 창의적인 적용), 중첩성(시스템의 유연성과 적응을 위해 중첩된 잉여영역의 구성), 피드백 루프의 조직화(의사소통과 정보 흐름의 유지와 조직화), 생태계 서비스, 일곱 가지로 정리한다.

이제는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새로움보다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전략의 가장 기본은 신뢰와 평등이다. 평등한 관계를 맺으며 신뢰망을 확장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올 여름은 무척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하루의 온도가 매우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높은 온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더 문제이다. 그리고 온도만이 아니라 연령, 직업, 소득 등에 따라 폭염의 영향이 달라진다. 폭염이 오면 나이가 많고 질환이 있거나 낮시간에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 가난하고 좁은 공간에 사는 사람, 녹지가 없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해진다. 폭염의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폭염이 오면 도서관이나 에어컨이 가동되는 공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코비드19 이후에도 그렇게 행동할까? 혹은 폭염이 오면 태풍, 홍수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김용덕의 『신한국사의 탐구』(범우사, 1992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85년 전 신의주로부터 의주로 가는 길가 곳곳에는 상자가 놓여 있었으며 그 속에는 엽과 담배 등이 들어 있었다. 길 가는 나그네는 마음대로 열쇠도 없는 상자에서 엽과 담배를 꺼내서 먹고 피우고 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가는 사람은 없었고 반드시 먹고 피운 만큼의 돈을 상자 속에 넣고 갔다고 한다. 말하자면 엽과 담배의 자동판매기 격이지만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나그네에 대한 동리사람들의 서비스 내지는 상호부조적 의미가 깃들여 있었던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높은 공중도덕으로 이 제도는 훌륭히 유지되고 있었으니 오늘날의 북구 선진국을 뺀치는 미풍이라 할 것이다.”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런 상점들이 늘어나면 어떨까? 상점만이 아니다. 반찬거리나 생필품을 나누는 상점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상점들의 법인격이 공공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는 지역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새로운 건물을 세우고 공간을 꾸미는 것보다 망하는 상점이나 가게를 공공(公共)이 인수하면, 이것은 너무 많은 자영업을 공공노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상점이 물리적 거점이라면 아프거나 고통 받는 사람들이 배제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계망을 이어주는 활동(평상시에는 잘 티가 나지 않는 활동)은 관계적 거점이 될 수 있다. 당장 도움은 안 될지라도 먹을 것을 나누고 안부를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돈독해질 수 있다. 꼭 촘촘하게 이어진 관계망을 바랄 이유는 없다. 좀 느슨하게 이어져 있다 필요할 때 촘촘해지면 된다. 때로는 느슨해진 관계가 시기를 놓쳐 끊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살짝 비는 관계망을 적절하게 이어줄 사람들의 활동(영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의 홍반장처럼)이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받고 좋은 대우를 받으면 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남성들에게 필요하다.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가능하려면 기본적인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교육은 전문지식의 전달과 함께 평등하게 사는 법에 맞춰져야 한다. 그래야 함께 생존과 생활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도 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시스템도 이미 우리에게겐 갖추어져 있다. 지역사회라고 해서 꼭 면대면으로 만날 이유는 없다. 카톡이나 밴드로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에너지와 식량, 주택을 함께 마련해가는 과정,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동체가 지탱해 주는 과정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